北 미사일 발사

정부 대응·한미공조 논란

"대책회의 日보다 2시간 이상 늦어"

'위성체냐 미사일이냐' 성격규정 결국 오판
정부 "위성 판독 결과 등 美와 정보 공유"

북한이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한 이후 정부의 사전 정보수집 및 판단력, 사후 대응 조치, 한미정보공조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 정부 당국은 상황 발생 조짐 초기부터 관련국과의 정보공조를 바탕으로 사태를 면밀히 예의주시해왔고,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이 지난 5일 오후에서야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위성체냐, 미사일이냐' 판단 논란=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5일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포동 2호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까지도 '대포동 2호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미사일'이라고 단정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발사체의 궤도를 추적한 후에야 미사일 여부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발사된 뒤에야 정확한 성격 규정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제 발사체가 '미사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정부의 신중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나친 낙관론 논란 = 지난달 중순 일본 언론의 '금명간 발사 임박' 보도 이후 상황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지난달말부터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정부내에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여부를 둘러싼 상황판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늑장 대응' 논란=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5일 새벽 정부의 대응이 일본 정부의 대응과 비교돼 늦었고, 대통령에 대한 초동보고도 지연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다.

일본은 첫 미사일 발사후 20여분이 경과된 뒤인 이날 오전 4시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 긴급 현황보고가 이뤄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번째 미사일인 대포동 2호가 발사된 직후인 오전 5시께 첫 보고를 받았다. 또 일본은 오전 5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열렸고, 우리는 오전 7시30분에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시간차도 이같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상황과 사태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보고의 완급이 정해져 있어 대통령 보고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미 미사일 정보공조=한국 정부가 과연 언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사전 감지했고, 미사일 발사후 즉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부를 제때 받았는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는 대목중 하나이다.

최근 미사일 임박 징후는 지난 주말을 전후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5일부터 동해 특정해역을 설정해놓고 자국 선박들에게 '항해금지'를 지시한 정황이 정보당국에 의해 감지됐고, 이같은 정보는 미국 등과 즉각 공유됐다고 한다. 대포동 주변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도 '임박 징후'로 포착되면서 '미사일 발사 초읽기'에 대비해 정부 당국의 만반의 태세 돌입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7번째 발사 의미는=북한이 5일 새벽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 6기의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오후 5시22분께 7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도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기술적 측면의 분석은 차치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가해 올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미사일 6기를 발사한 직후 미국과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 대북 제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한국까지 대북지원 재고를 언급하자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美 요격미사일 비상 가동

북부사령부 "방어(MD) 시스템 첫 실전 대응"

미국은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한 요격미사일을 비상 가동했다고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운용을 맡고 있는 미 북부사령관은 이날 MD시스템 운용요원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를 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부사령부는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즉각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실제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MD시스템을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브라이언 위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안 요격미사일이 가동됐고, 모든 미사일 발사과정이 탐지되고 감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CNN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의 MD시스템이 그동안 10차례의 실험에서 절반만 성공했었지만 그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MD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확신했었다"고 말했다.

CNN은 미국의 MD 시스템이 지난 2001년과 2002년 4차례 연속적으로 성공했었다면서 "그후 4년뒤 많은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안보리 논의는 분위기 조성용

미사일 발사 규제 법적 근거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

안보리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논의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권국가 또는 유엔 회원국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규제할 국제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체계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지침'(H-COC) 등이 있지만 이는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신사협정 내지는 선언적 신뢰구축 조치에 불과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안보리 결의안을 내놓으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의장성명이었던 것이다. 당시 사례는 한마디로 주권국가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겐조 오시마 유엔 주재 일본대사, 에머 존스패리 유엔 주재 영국대사(왼쪽부터)가 5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참석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응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등이 마련한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등이 마련한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은 대북 경고의 뜻을 천명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보다 내용이 다소 강화되겠지만 그나마 북한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 실효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미정상 통화 언급 '외교적 해법' 최적 채널

미사일도 6자회담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동요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6일 전화통화를 가졌다. 지난해 9월 베이징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0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전화통화의 결론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정태호 청와대 대변인)는 것으로 요약됐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묻는데 양국이 보조를 같이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정하며 대비해온 '제재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함께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일본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발사 전과 북한이 느낄 체감 분위기는 확연하게 차가와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간 이날 대화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대목은 '외교적 해결'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미사일 사태, 나아가 핵문제의 궁극적인 탈출구는 '외교적 해법'에 있다는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의 구체적 모습은 현재의 북핵 6자회담으로 귀결된다.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등을 국제사회가 관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다자적 틀내에서 보장하는 6자회담이 현시점에서 최적의 외교채널이라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한미 정상은 다양한 실무 채널간 협의를 토대로 오는 9월 열릴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인 한미 관계와 북핵 및 미사일,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 차원에서 미사일 사태는 물론 한반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북한을 몰아붙이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상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로 한 이상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미간 양자회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이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틀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